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 추진... 민주당 '전면전' 선포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국회서 1인시위 돌입... 특검 전략 세우기로 박홍근 "자진사퇴·해임 거부 문책 불가피"... 오늘 의총서 소추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본격 추진한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검찰리스크'에 맞서 윤석열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어서 2월 정기국회도 여야의 극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도 정쟁 속에서 민생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유족 뜻에 따라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윤 대통령에게 해임도 건의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부득이하게 이 장관의 문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등의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이 장관에게 정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 데 더해, 윤석열 정권이 민생 대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외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을 검토를 거치는 등 그간 관련 절차를 준비해 온 만큼 2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추진도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가 이어지는 등 검찰의 '야당 탄압' 강도가 더해진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특검 추진 여론도 점점 힘을 얻는 분위기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당내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TF)'도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특검 추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화' 등 당 소속 의원 40여 명은 이날 저녁 로텐더홀에 모여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비롯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 민생문제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를 겸한 '밤샘 토론 및 농성'을 할 예정이다.

다만 이 장관 탄핵소추안과 달리 '김건희 특검' 추진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의 방법을 써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 공동전선 구축이 필요한 현실이다.

민주당의 초강경 대응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이 대표 방탄 전략이라는 논리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당권주자들과 최고위원 주자들도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정국은 격랑에 빠져들면서 민생 이슈가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이상민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맞물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제로섬 정쟁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이라며 "정쟁의 포연 속에서 민생은 더욱 고달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부, 난방비·물가폭탄 해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난방비·물가폭탄 운정권이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민 61.9% "이재명, 기소돼도 당 대표 유지해야"

한국갤럽 조사

호남지역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성남FC 등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지난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대표직 유지에 대한 견해와 관련,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로 과반을 차지했다. '대표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응답은 38.3%에 그쳤다.

대체로 보수·중도층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

다고 답한 반면 진보층은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40대를 제외한 연령대 전반에서 사퇴 여론이 높았다. 보수층에선 사퇴해야 한다(80.1%)는 응답이 유지해야 한다(16.4%)는 답변을 압도한 반면, 진보층에선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62.8%)가 사퇴해야 한다(31.9%)는 응답보다 컸다. 중도층에선 사퇴(52.1%) 여론이 유지(41.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유일하게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61.9%)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가장 높은 곳은 대구·경북(70.4%)이

있으며 강원(68.8%), 제주(66.7%), 부산·울산·경남(65.5%), 서울(55.8%), 대전·세종·충청(53.8%), 인천·경기(51.8%)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국민의힘 지지층은 95% 신뢰수준에 ±4.9%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불법 변칙 사행행위 사업장 단속 법안 발의

이병훈 의원 "사행산업 폐해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 국회의원은 1일 불법 홀담법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각지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담(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담법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하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담법'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상적인 홀담법은 손님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음료와 함께 게임에서 통용되는 칩을 받아 게임을 즐기고, 파낸 칩의 숫자에 따라 각종 대회 참가권을 지급하는 등 체스나 바둑과 같이 지성을 겨루는 '마인드 스포츠'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상품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불법사행행위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현장 지도·감독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홀담이 체스나 바둑과 같은 건전한 여가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변칙 홀담법 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사각지대의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부정행위 경찰 합격자 임용 취소 법안 발의

이형석 의원 "비리 사전 차단"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국회의원은 1일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 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처럼 '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치·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이 보다 투명화되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상가매매 (상무지구.유형적합) (임대가능)

- ▶ 중심 상업지구
- ▶ 유형가능 (전용 100평)
- ▶ 시세 - 10억
- ▶ 급매 - 7억 (용4억)

(보4천, 월수익 400만)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동구 금남로 (주택)	▶ 감정가 2억5천만 → 최저가 1억1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2억1천

010-2614-9801